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곤혹”

한화증권, 김승연 회장 비자금 관리 의혹 ... 본사·증권 압수수색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혼란에 빠졌다.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9월16일 서울 장교동 그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9시경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그룹 본사와 한화증권이 차명계좌를 통해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은 한화증권을 퇴사한 한 직원이 2010년 초 “회사가 그룹 비자금 관리에 쓰는 불법계좌를 가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7월경 거액이 오간 차명계좌 5개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한 달 가량 내사를 벌이다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넘겼다. 5개 계좌에는 현재 5억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권가 안팎에서는 한화그룹이 해당 계좌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조성해 김승연 회장과 친인척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검찰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5개 계좌와 연결된 관련계좌를 추적해 자금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고 한화 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계좌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조성된 김승연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며 “실명화가 되지 못한 일부 계좌가 2004-05년 이후 방치되다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금감원에도 충분히 설명한 사안이며 검찰 조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16>